



인도 탄소시장 정책 동향 및 전망



인도 CDM 프로젝트 개발 활발

인도 정부는 2002년 8월 교토의정서를 비준하고 환경부 산하에 CDM 국가승인기구(DNA-Designated National Authority)로 NCDMA(National Clean Development Authority)를 설치하고 각종 CDM 인허가 업무와 함께 프로젝트 유치기능을 동시에 부여하며 CDM 사업을 개시했다. 인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교토 체제하의 자발적 감축국가로서 2003년부터 다수의 CDM 프로젝트를 승인해왔으며 2010년 6월 기준 513건의 프로젝트가 등록되고 탄소배출권 7915만 CERs가 발행되는 등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CDM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CDM 시장에서의 위상만큼이나 인도 정부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선진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하고 있다. 또한 자발적인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만큼 녹색성장은 앞으로 인도에 있어서도 중요한 성장 어젠다가 될 것이다.

CDM 프로젝트 수에 비해 실속은 아직 없어

인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CDM 개발의 실속은 없는 상황이다. 하나의 예로, 2010년 6월 기준 중국의 CDM 프로젝트 등록건수는 883건으로 인도의 1.7배이나, 탄소배출권은 2억 720만 CERs로 2.61배에 달한다. 즉 중국의 프로젝트 당 탄소배출권은 23만 CERs인데 반해 인도의 프로젝트 당 탄소배출권은 15만 CERs 수준으로 프로젝트 효율성이 뒤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베트남, 파키스탄 등 여타 아시아국과 비교해도 비슷한 상황인데, 인도 탄소시장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추진되는 것은 CDM 프로젝트 창출과 관련해서 대부분을 민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를 희망한다고 대외적으로 외치면서도 실상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이 없는 것처럼 CDM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같은 대외적 입장에 반해 프로젝트 투자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인도 기후변화 관련 국가행동계획 8대 과제

과제	내용
태양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지 산업계, 상업지구 등에서 태양열 기술 활용 향상 -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발전을 각각 연간 1,000MW로 증가
에너지효율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까지 10,000MW의 에너지 절약 - 에너지 절약 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 추진 및 기업 간 에너지 절약 인증서 교환시스템 도입 -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전자기기 등에 대해 세금 촉진
지속 가능한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지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에 중점(폐기물 통한 발전) - 자가용 연료기준 강화 및 친환경 차량 구매 촉진
수자원 관리	- 물 가격제 도입 등을 통해 수자원이용 효율성 20% 향상
히말리야 생태보전	- 수자원공급의 원천인 히말리야 빙하 보전을 위해 생태계 심리 등 관리
녹색 인도	- 6백만 헥타르 규모의 조림사업 시행 및 인도의 삼림면적을 현재 23%에서 33%로 증가
지속 가능한 농업	- 기후변화 적응성 곡물 개발, 기후관련 보험상품 확대 등
기후변화 관련 전략적 지식	- 기후과학연구기금(Climate Science Research Fund) 설립, 기후 모델링 개량, 벤처캐피탈을 통한 민간연구 지원 등

출처 : 인도 총리실 홈페이지(산은경제연구소 이슈분석 "탄소시장 :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재인용)

국가행동계획 8대 과제를 중심으로 CDM 프로젝트 추진

인도정부가 CDM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안 마련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인도가 우리나라에 비해 경제 발전 수준이 낮은 신홍경제개발국으로 분류되어 있어 포스트 교토체제에서도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될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탄소시장 정책과 가장 가까운 정책으로는 '기후변화 관련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Climate Change(NAPCC)'이 있으며, 8대 과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2009년 말까지 세부정책 수립에着手하기로 된 위의 8대 과제와 관련해서 가장 가시적인 정책안이 수립된 분야는 에너지 효율 분야와 재생에너지 분야이다.

우선 에너지 효율분야에서는 "에너지 효율성 거래제(Perform, Achieve and Trade Scheme, PAT)"의 1단계가 2011-12 회계연도부터 2013-14 회계연도까지 3년간 시행될 예정으로 인도의 에너지효율청(BEE)은 산업계와 에너지 효율성 측정법과 목표설정법, 거래제 시행법 등을 논의해서 정책을 입안하였다.

이 제도는 인도가 코펜하겐 합의문에 따라 UN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계획에 나와 있는 감축 수단 중 하나로 발전소, 제철, 철도 등 약 700여개 시설에 대한 특정 에너지 사용량 목표를 설정하게 되며, 목표 초과 달성을 염두에 네너지 절약 증서(ESCserts)를 지급받아 목표 미달 업체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 동 제도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인도 정부는 2010년 10월까지 사용량 목표 설정방법론 연구를 포함한 상세 방법론을 연구하게 된다.

두 번째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RECs) 제도가 발표되었다. 재생에너지 증서는 전체 전력량 중 일정량을 재생에너지원에 시 구입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들이 매매할 수 있는 증서로 증서 한 장은 전력 1MWh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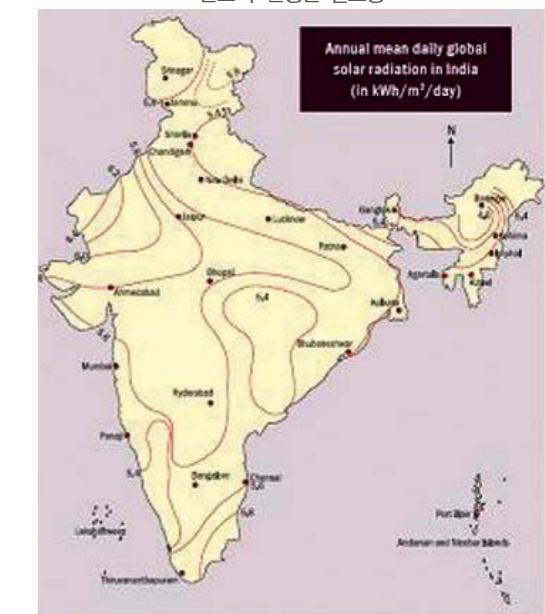
인도는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나라임에도 투자 대비 기대수익이 낮아 민간 투자가 정부 목표수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전력 부족상황을 개선함과 동시에 지속가능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15GW와트 수준으로 총 전력 생산의 10%에 불과한 재생에너지를 향후 4년간 25GW까지 증대할 계획이다.

이 재생에너지 증서 제도 도입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발전된 전력을 특혜 요금으로 판매하거나 재생에너지 생산에 수반되는 CDM 프로젝트와는 분리해 따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시장 창출 및 기업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중 태양광의 경우, 친해의 높은 잠재력과 정부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다른 재생에너지에 비해 현저히 발전이 지연되고 있는 분야로, 최근 각종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방면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2009년 11월말 국가 태양 패지(National Solar Mission) 도입을 통해 현재 3MW에 불과한 태양광 발전용량을 향후 10년 동안 20GW까지 늘릴 것으로 발표한 바, 이와 관련한 다수의 CDM 프로젝트가 시행되며 탄소 시장을 활성화시킬 전망이다.

인도의 연평균 일조량



자료 : 인도 신재생에너지부(MNRE)

더디지만 성공적으로 탄소시장 키워

인도의 탄소시장은 세계 각국, 특히 선진국의 기대보다 다소 못 미치는 더딘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정부의 큰 그림 아래 체계적인 형태로, 또한 인도의 일반적인 정책 추진 속도를 생각해 볼 때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정책의 정교함은 우리나라에 비해 떨어질지도 모르겠으나, CDM 프로젝트 수와 탄소 배출권반을 놓고 본다면 성공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도, 그 탄소시장의 성장을 기대해본다. ↗